

배포 일시	2022. 5. 31.(화)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실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정채교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 장 원 (044-201-4602)
보도일시	2022년 6월 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31.(화) 17:00 이후 보도 가능		

철도산업계 규제, 더욱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

- 31일 국토부-업계 소통 간담회서 미래 철도산업 상생발전 모색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5월 31일(화) ‘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’을 주제로 철도차량·부품업계,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 -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철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(4.1.)에 이어 철도의 안전운영에 필수적인 철도시스템 산업계와 철도기술의 발전방향,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- ▶ 일시 / 장소 : `22.5.31(화) 15:00 / 서울역 인근 회의실
- ▶ 참석 : 차량·부품제작사 9개, 신호제작사 7개, 궤도제작사 3개,
교통안전공단, 철도공단, 철도공사, 철도기술연구원 등

- 이번에 업계와 공유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①철도 R&D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, ②철도차량·부품산업 혁신성장 방안 및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, ③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(KTCS : Korean Train Control System) 개발 성과 및 추진방향이다.

- 먼저, 그간의 공급자·개발자 중심의 연구가 아닌 수요자(국민)·산업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, ‘스마트 철도 안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’, ‘고속철도 사전급속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개발’ 등 주요 연구 과제를 소개하였다.
- 다음으로, 내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철도차량·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①산업 선순환구조와 ②민간시장 육성, ③세계시장 관점과 ④통합적 육성이라는 4가지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하는 한편, 제2철도교통관제센터·종합시험선로·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각 기능·시설을 집적하여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소개하면서 업계의 동참을 독려했다.
- 마지막으로,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올해 4월부터 전라선 구간에 적용된 무선통신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(KTCS-2)의 개발성과와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(KTCS-3) 개발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※ 궤도회로를 사용하는 KTCS-2와 달리, KTCS-3는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열차 위치를 검지하여 열차를 제어

□ 한편,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기업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.

- 먼저, 철도용품 공인시험인 형식승인·제작자승인에 비용부담이 많고, 다년 납품 사업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요청하였다.
- 또한,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설계단가가 1~2년 전 납품단가로 반영되는 등 업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하였다.

-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 외로 철도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면서,
 - 철도용품 형식승인·제작자승인에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,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하였다.

- 국토교통부 강희엽 철도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, “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함께 최근 GTX, 지방광역철도 등 유례없이 많은 철도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, 철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운영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”면서,
 - “산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, 별도의 규제혁신 TF를 구성·운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